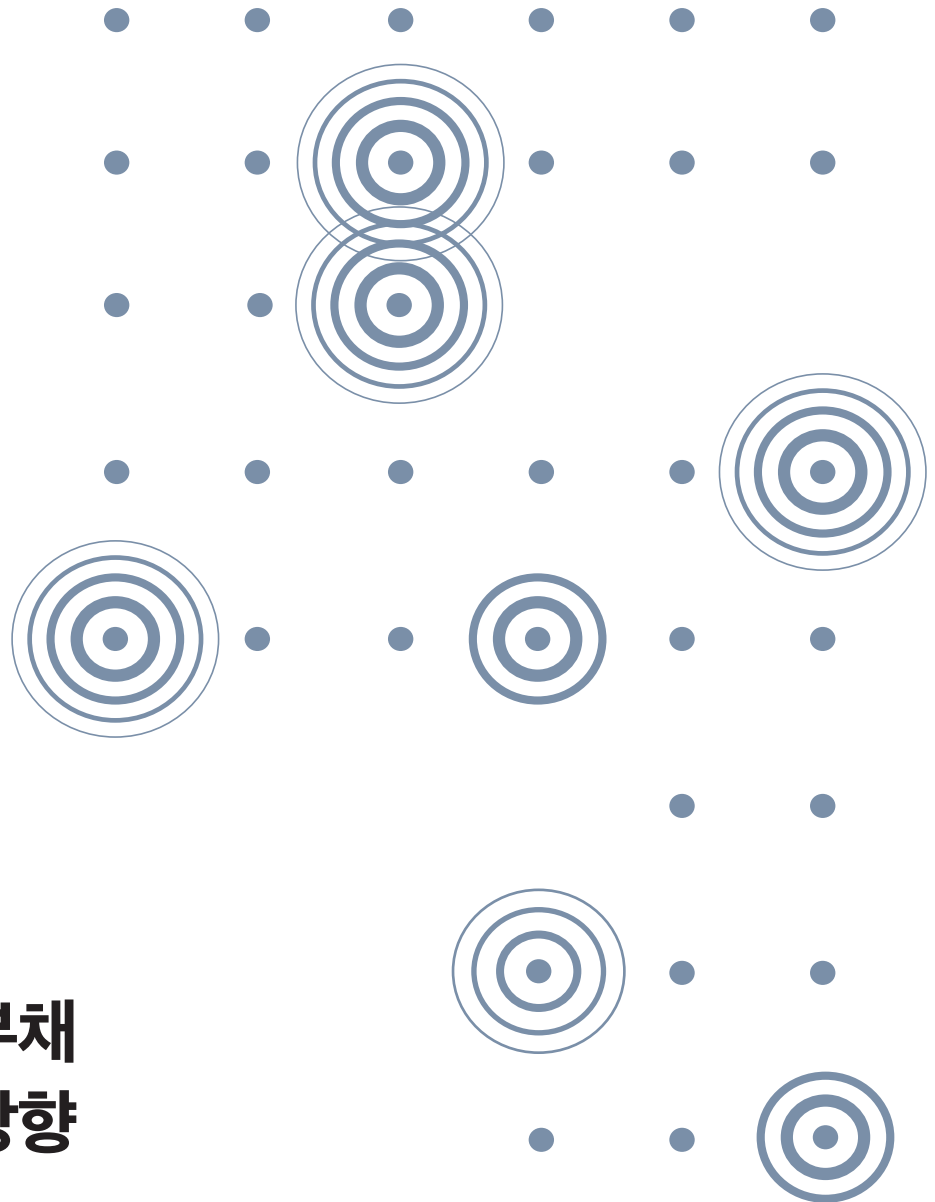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273호 2019. 4. 8



서울시 가계부채 진단과 정책방향

박희석
연구위원

정현철
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273호

서울시 가계부채 진단과 정책방향

발행인 서왕진

편집인 최 봉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19년 4월 8일

※ 이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서울시 가계부채 진단과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가계부채 진단과 정책방향

박희석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i.re.kr

정현철 연구원
02-2149-1371
geoculture@si.re.kr

요약	3
Ⅰ.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4
Ⅱ. 서울지역 가계부채 현황	7
Ⅲ. 서울시 가구의 가계부채 실태	9
Ⅳ. 정책제언	16

요약

서울시 가구는 상대적으로 큰 자산 규모에 비해 절대적인 부채의 총량은 크지 않다. 하지만 평균 가구소득의 17.2%를 부채 상환에 지출하고 있는 등 가계부채가 가계경제의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수요자 맞춤형 정책 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부동산·한계가구·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 가계부채, 주택대출이 가장 큰 비중 차지

최근 서울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2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서울의 가계부채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까지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2018년에는 6.9%로 전국(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가계부채에서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금취급기관 기준 60.5%로 전국의 58.4%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 가구 “가계부채의 원금상환·이자지출에 부담 느껴”

서울시 개별가구의 가계부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담보대출은 금액대가 가장 컸지만, 이자율은 가장 낮았다.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대출은 상대적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자율이 높았으며, 생계비 사용 목적으로 대출했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시 가구는 대출에 비해 자산이 많고 원금과 이자의 연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건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채가 있는 가구는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채 보유에 따른 원금상환과 이자납부는 가계경제의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평균 가구소득의 17.2%를 부채 상환에 지출하고 있었으며, 가구소득 대비 부채 상환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응답비율도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 위해 장기적·복합적인 수요자 맞춤형 처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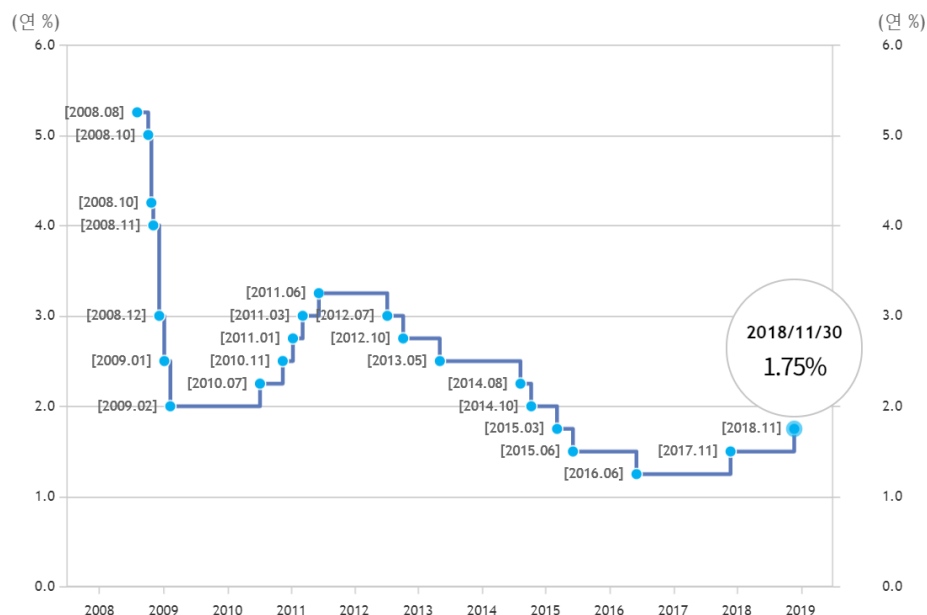
서울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이며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와 동시에 충분한 정책체계를 수립하여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의 장점을 살린 정책을 수립·시행해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가계부채 관련 현안과 정책을 현시점에서 다시 점검하여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한계가구·영세자영업자의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I.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I 금융 완화기조 유지로 부동산 투자 증가

경기부양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 부동산 투자 증가로 이어져

- 저금리 기조를 지속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로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
 - 한국은행은 2011년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여 2017년 11월에는 1.50% 수준까지 내리는 등 저금리 기조를 유지
 - 기준금리의 지속 인하는 주택구입 수요 증대로 이어져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
 - 선진국 경제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차입비용 감소가 실질적 주택구입 관련 비용 경감으로 이어져 주택구입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 발생



[그림 1]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황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정부정책 흐름에 발맞춰 부동산 규제 완화 지속

-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병행하여 시행
 - 부동산 관련 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규제 강화와 완화를 번갈아 가며 관리를 해왔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규제 완화의 흐름이 우세
 - 2014년 7월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50%에서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존 50%에서 60%로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

- 정책적 지원, 규제 완화, 유동성 공급 등이 어우러져 주택시장이 활성화
 - 부동산 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택지지구 계획변경기간 단축 등을 시행
 -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어 주택시장이 활성화

I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로 자영업자 대출 증가

소상공인 경영환경 날로 악화, 전반적인 체감경기 침체 지속

- 경기침체 이외에도 임대료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전망은 어두운 상태
 - 일부 지역에서는 급격한 임대료 인상에 따른 등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기존 상권에서 퇴출되고 있는 상황
 - 최근 2년간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

영세 자영업자 가계수지 악화에 따른 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증가

- 소상공인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 손실이 가계부채로 연결되는 등 자영업자의 가계수지가 악화
 - 경기침체로 사업환경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한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는 폐업률
 - 소상공인은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며, 생계자금을 대출 등으로 조달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

I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창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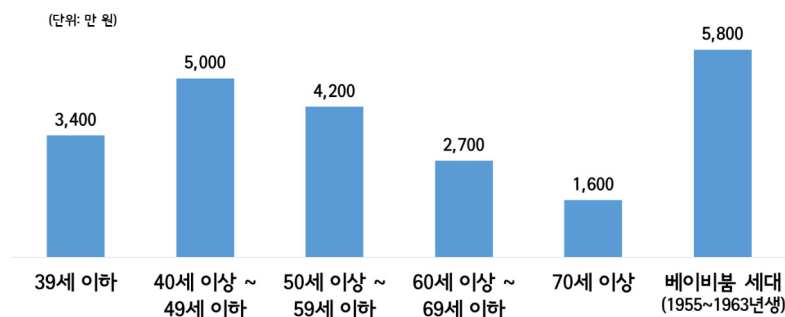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 고령자 창업 늘어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소득의 급격한 감소 체험
 - 전체 인구의 약 14.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중간연령인 1959년생이 2019년에 만 60세가 되는 등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다시 취업한다고 해도 이전보다 급여가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
-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창업
 - 2017년 기준 대표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사업체가 87만 5,299개로 1년 전에 견줘 5만 1,998개(6.3%)가 증가하는 등 고령자의 창업이 증가

상대적으로 부채 규모가 큰 베이비붐 세대

- 전 연령대를 통틀어 부채의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은 베이비붐 세대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현재 40대의 평균 금융부채는 5,000만 원으로 조사되었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이보다 많은 5,800만 원
 -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창업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바탕으로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려는 계획을 실천한 결과 이들의 가계부채가 급증



[그림 2] 연령대별 평균 금융부채(2017년 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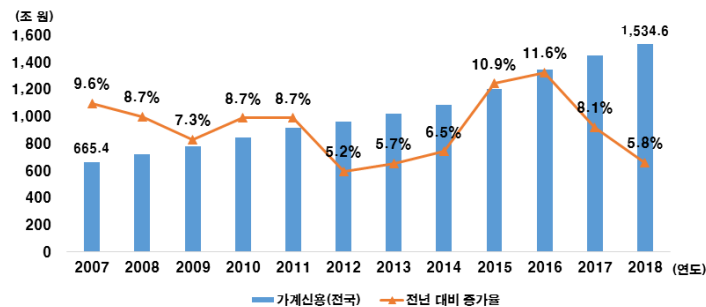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II. 서울지역 가계부채 현황

I 가계부채 증가 속도 완화 추세

서울의 가계부채, 2013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 최근 증가세 완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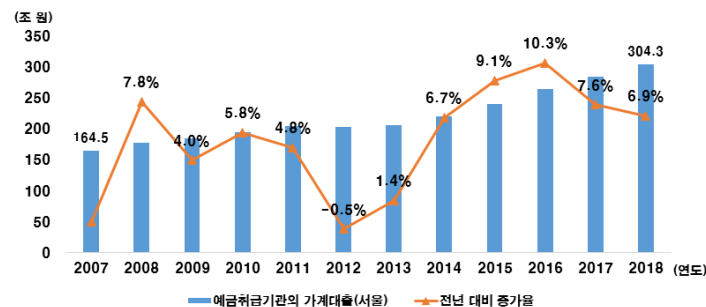
- 가계신용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2018년에 1,500조 원을 돌파
 - 2007년 665.4조 원이었던 가계부채는 2007년 이후 연평균 7.9% 증가하여 2018년 연말 기준 1,534.6조 원으로 약 2.3배 증가
 -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 불과하였지만, 2016년에 11.6%로 급상승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최근 하향세



[그림 3] 전국 가계부채 현황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서울지역의 2018년 가계부채는 304.3조 원으로 증가
 - 2007년 164.5조 원이었던 서울지역의 가계부채는 2007년 이후 연평균 5.8% 증가하여 2018년 연말 기준 304.3조 원으로 약 1.8배 증가
 -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까지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2018년에는 전국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



[그림 4] 서울지역 가계부채 현황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 한국은행은 지역별 판매신용과 기타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가계부채는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을 기준으로 파악

I 가계부채 주요 증가 요인은 주택대출

주택관련 대출,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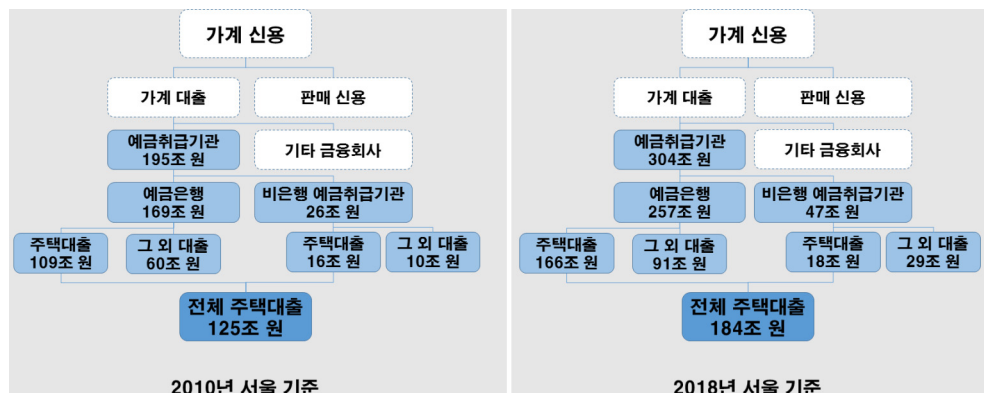
- 전국의 예금취급기관 기준 전체 가계대출에서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8.4%
 - 예금취급기관 기준으로는 2018년 연말 1,034조 원으로 2010년(594조 원)보다 440조 원 증가
 -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대출도 2010년 363조 원에서 2018년 연말 기준 604조 원으로 8년 동안 241조 원 증가



[그림 5] 전국의 가계부채 구성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서울의 예금취급기관 기준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5%
 - 서울지역의 가계부채는 2018년 연말 기준 304조 원으로 2010년(195조 원)보다 109조 원 증가
 - 주택대출은 2018년 184조 원으로 2010년(125조 원)에 비해 59조 원 증가



[그림 6] 서울의 가계부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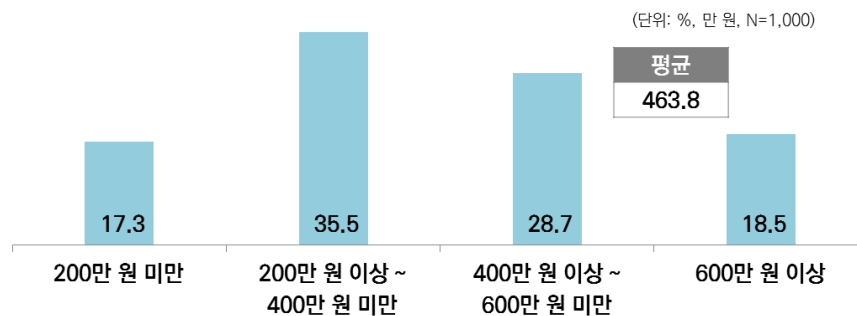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Ⅲ. 서울시 가구의 가계부채 실태

Ⅰ 서울시 가구, 자산 대비 부채비중 낮은 편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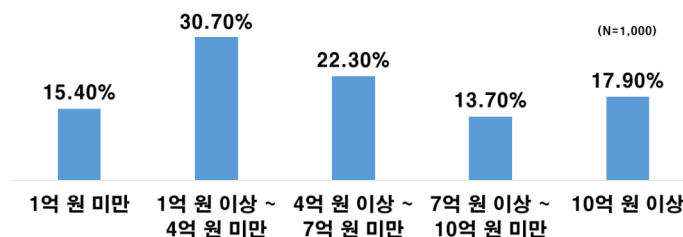
서울시 가구의 자산 중위값은 4억 5,100만 원

-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63.8만 원
 - 200만 원 미만 17.3%,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35.5%,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28.7%, 600만 원 이상 18.5%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



[그림 7]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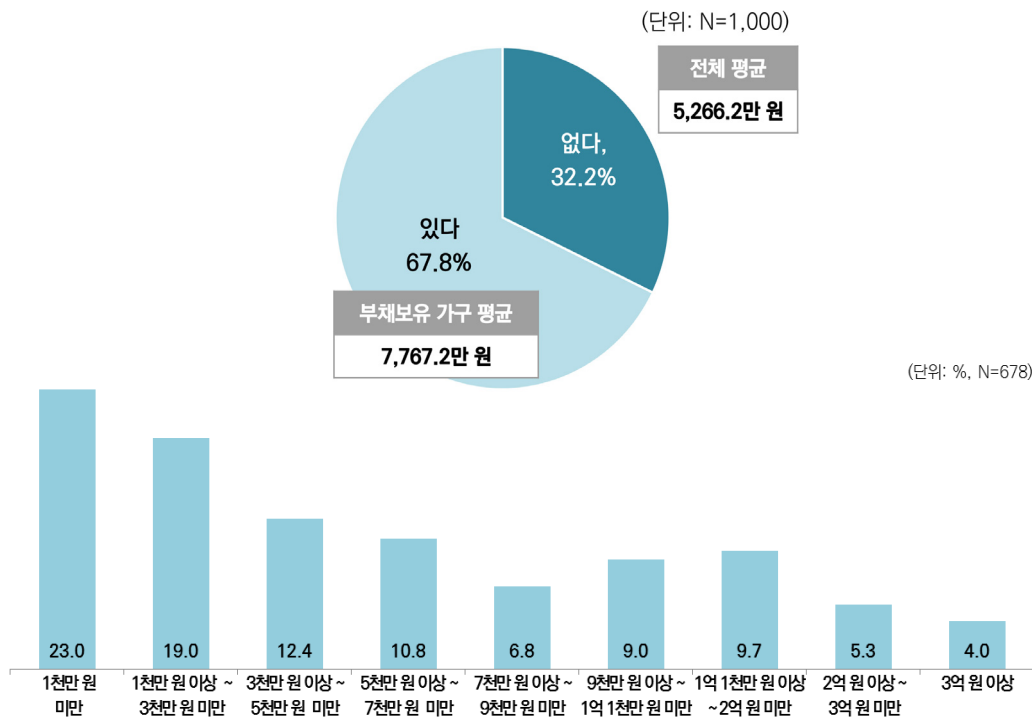
- 조사대상의 평균 자산은 6억 9,943.9만 원이며 중위값은 4억 5,100만 원
 - 1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미만이 30.7%로 가장 많았으며, 4억 원 이상에서 7억 원은 22.3%, 7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미만은 13.7%
 - 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17.9%)에 고액 자산가가 포함되어 평균 자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



[그림 8] 응답자의 자산 분포 현황

2)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관련 일반현황과 가계부채 관련 정책 방향의 실태조사를 진행함. 조사는 2018년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pm 3.1\%$ p임. 서울시민의 가계부채 관련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서울시 가계부채 진단과 정책방향』(서울연구원, 2018)을 참고.

- 조사대상 1,000명 중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67.8%였으며, 이들의 평균 부채는 7,767.2만 원
 - 조사대상 중 부채보유자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1천만 원 미만이 23.0%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기록하는 등 5천만 원 미만의 부채보유자 비중이 54.4%에 달해



[그림 9] 부채보유 가구 현황과 구간별 부채 분포 비중

I 담보대출, 부채에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담보대출 대부분 제1금융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적용

- 담보대출의 보유 비중은 다른 대출에 비해 높았으며, 큰 금액, 긴 대출기간, 낮은 금리가 특징
 - 담보대출은 부채보유자의 60.5%가 있었으며, 건당 평균 금액은 9,698.3만 원
 - 대출기간은 평균 13년이었으며, 5년 미만은 28.2%였고 20년 이상은 35.9%를 차지
 - 담보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4.0%였으며, 5% 이상의 대출이율을 적용받고 있는 비중은 16.8%에 불과

- 담보대출은 용도가 비교적 명확하고 담보물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실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파악
 - 담보대출의 용도는 거주용 부동산 마련이 70.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투자용 부동산 마련(10.6%), 사업자금 마련(8.6%), 생계비 마련(4.5%) 등의 순
 - 담보대출은 대부분(91.4%) 제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농협·수협중앙회 포함)에서 이루어졌다고 응답
 - 주요 담보물은 거주주택이 75.2%였으며,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이 11.9%, 금융자산은 6.3%, 기타(전세권·자동차 등)가 6.7%로 실물자산이 대부분을 차지

[표 1] 담보대출 현황

(N=464)

구분	내용
가구당 대출 건수	1건 89.8%, 2건 이상 10.2%
총 대출 건수	464건
평균 대출 금액(잔액)	9,698.3만 원
대출 기관	은행(농협·수협중앙회 포함) 91.4%
주요 담보물	거주주택 75.2%, 이외 부동산 11.9%, 금융자산 6.3%, 기타(전세권·자동차 등) 6.7%
상환 방법	원금분할상환 33.8%, 만기일시상환 31.5%, 원리금균등상환 23.3%, 원금·원리금분할+일부 만기상환 9.9%
대출 기간	평균 13년 (5년 미만 28.2%, 5~20년 35.8%, 20년 이상 35.9%)
최초 대출금액	12,609.2만 원
평균 이자율	4.0%
담보대출 용도	거주용 부동산 마련 70.3%, 투자용 부동산 마련 10.6%, 사업자금 마련 8.6%, 생계비 마련 4.5%

주: 내용에 나오는 항목별 수치의 합계는 일부 기타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음

신용대출, 금리 담보대출보다 높고 대출규모 작아

- 신용대출은 담보대출에 견줘 보유비중·규모·금액 등이 작으며, 대출기간도 짧은 것이 특징
 - 부채보유자의 34.8%는 신용대출이 있었으며, 최초 평균 대출금액은 2,946.6만 원
 - 신용대출 보유자의 평균 대출잔액은 2,068.5만 원
 - 신용대출 기간은 평균 3.5년으로 2~3년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1년은 32.4%, 4~7년이 24.3%, 7년 이상은 8.7%로 확인

- 신용대출은 이자율이 높지 않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하였다는 점 때문에 충분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신용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6.9%였으며 이자율 5% 미만의 비율이 54.1%를 차지
 - 신용대출 기관은 은행(농협·수협중앙회 포함)의 비중이 66.7%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저축은행(9.3%), 보험회사(6.5%), 여신 전문 기관(캐피탈 등)(4.4%), 대부업체(3.4%) 등의 순
- 신용대출은 담보대출보다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추정
 - 신용대출의 주요 용도는 생계비 마련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거주용 부동산 마련(19.6%), 차량 구입(12.5%), 사업자금 마련(11.5%), 학자금 마련(5.3%), 대환대출(5.0%), 투자용 부동산 마련(3.4%), 의료비 마련(3.4%), 결혼자금 마련(2.8%) 등의 순

[표 2] 신용대출 현황

(N=321)

구분	내용
가구당 대출 건수	1건 76.7%, 2건 이상 23.3%
총 대출 건수	321건
평균 대출 금액(잔액)	2,068.5만 원
대출 기관	은행(농협·수협중앙회 포함) 66.7%, 저축은행 9.3%, 보험회사 6.5%, 여신 전문 기관(캐피탈 등) 4.4%, 대부업체 3.4%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36.1%, 원금분할상환 26.8%, 원리금균등상환 25.2%
대출 기간	평균 3.5년 (2~3년 34.6%, 1년 32.4%, 4~7년 24.3%, 7년 이상 8.7%)
최초 대출금액	2,946.6만 원
평균 이자율	6.9%
대출 용도	생계비 마련 33.3%, 거주용 부동산 마련 19.6%, 차량 구입 12.5%, 사업자금 마련 11.5%, 학자금 마련 5.3%, 대환대출 5.0%, 투자용 부동산 마련 3.4%, 의료비 마련 3.4%, 결혼자금 마련 2.8% 등

주: 내용에 나오는 항목별 수치의 합계는 일부 기타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음

신용카드 대출, 상대적으로 금리 높아 이자부담 클 것

- 신용카드 대출은 보유자가 적고 금액도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 때문에 가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
 - 신용카드 대출은 부채보유자의 13.6%가 가지고 있었으며, 건당 평균 금액은 404.8만 원으로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편

- 신용카드 대출의 이자율은 평균 10.0%였으며, 11%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비중이 42.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신용카드 대출 형태를 살펴보면 현금서비스(54.0%), 카드론(43.7%), 대환대출(2.4%)의 순
- 신용카드 대출은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추정
- 신용카드 대출의 용도는 생계비 마련이 53.2%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사업자금 마련(13.5%), 거주용 부동산 마련(7.1%), 의료비 마련(7.1%), 차량 구입(6.3%), 학자금 마련(4.0%), 투자용 부동산 마련(3.2%) 등의 순

[표 3] 신용카드 대출 현황

(N=92)

구분	내용
가구당 대출 건수	1건 76.1%, 2건 이상 23.9%
총 대출 건수	126건
평균 대출 금액(잔액)	404.8만 원
대출 형태	현금서비스 54.0%, 카드론 43.7%, 대환대출 2.4%
대출 기간	평균 3년(1년 64.3%, 2년 17.5%, 3년 이상 18.3%)
최초 대출금액	703.3만 원
평균 이자율	10.0%
대출 용도	생계비 마련 53.2%, 사업자금 마련 13.5%, 거주용 부동산 마련 7.1%, 의료비 마련 7.1%, 차량 구입 6.3%, 학자금 마련 4.0%, 투자용 부동산 마련 3.2% 등

주: 내용에 나오는 항목별 수치의 합계는 일부 기타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음

I 부채보유 가구 가계부채 관리 노력 중

서울시 가구 상당수 가계부채 관리 중

- 가계부채가 증가하였다는 응답보다 감소하였거나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
 - 조사대상인 부채보유 가구는 가계부채에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42.8%)과 감소하였다는 응답(42.6%)이 비슷하였으며,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14.6%에 불과
-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에서 부채가 증가하였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부채가 증가하였다는 응답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0.1%로 가장 높았으며, 20대와 30대는 각각 15.9%와 16.0%, 그리고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8.5%와 11.3%를 차지

- 소득이 많아질수록 부채규모가 증가하였다는 응답비율이 감소
 - 가계부채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을 월 가구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월 200만 원 미만이 25.5%로 가장 높았으며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은 14.7%,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은 11.8%, 600만 원 이상은 10.2%

서울 가구 대부분 부채 줄이는 노력 중

- 서울시 가구는 주로 소득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부채를 상환 중
 -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
 - 부채 상환방법을 살펴보면 소득으로 상환하였다는 응답이 80.4%였으며, 기타 응답³⁾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
- 소득이 낮을수록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
 - 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응답비율은 월 200만 원 미만에서 17.9%로 가장 높았으며,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11.6%,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은 9.4%, 600만 원 이상은 8.8%로 조사

실질소득 많을수록 가계부채 부담 줄어드는 경향

- 가계부채 보유에 따른 원금상환과 이자납부가 가계경제의 부담요소로 작용
 -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원금상환 및 이자납부의 가계 부담을 살펴보면 부담이 된다(매우 부담스럽다 10.6%, 부담스럽다 52.2%)는 응답이 부담되지 않는다(전혀 부담이 없다 2.7%, 부담이 없다 8.6%)는 응답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가계부채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판단
 - 소득수준이 클수록 가계부채의 원금상환과 이자납부의 부담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
 - 월 가구소득별로 원금상환과 이자납부가 부담된다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만 원 미만은 73.6%인 반면, 600만 원 이상은 49.6%

가계부채의 전반적 건전성, 어느 정도 확보돼

- 서울시 가구 대부분은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체 없이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
 - 원금상환과 이자납부의 연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87.8%로, 있다는 응답(12.2%)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

3) 주거 축소·주거지 이동 등으로 상환(3.7%),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 처분(거주 주택 제외, 1.2%), 상속이나 증여로 상환(0.1%) 등

- 연체 발생은 지출보다 소득의 문제에서 기인
 - 소득 감소(26.5%), 납부기일 착오(21.7%), 자금 융통 차질(20.5%), 이자율 증가에 따른 부담 증가(15.7%), 가계지출 증가(14.5%), 상속이나 증여로 상환(0.1%)의 순
 - 납부기일 착오를 제외하면 연체의 주된 이유는 소득·자산·지출의 문제로 발생하였다고 요약할 수 있는 상황

서울시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중은 평균 17.2%

- 가계부채 상환이 소득에서 낮지 않은 비중을 차지
 - 서울시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중은 평균 17.2%로 조사
 - 구간별로 살펴보면 5% 미만인 24.4%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인 10~15% 미만(18.9%), 20~30% 미만(16.9%), 30~50% 미만(11.3%) 등의 순
 - 50% 이상도 8.9%에 달하는 등 부채에 따른 가계 부담이 큰 것이 현실
- 부채 상환 비중은 소득 분포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
 - 월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지만, 200만 원 미만에서는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중이 19.8%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

IV. 정책제언

I 서울시, 가계부채 문제 해결 위한 다각도 노력 필요

서울시의 적극적 정책수단 마련 요구

-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 장기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와 동시에 충분한 정책 체계를 수립하여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
- 서울시는 미시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
 - 거시적 측면의 문제 해결 방안은 중앙정부의 영역이므로, 서울시는 사회복지체계를 활용하여 한계가구와 영세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
- 서울시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가계부채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 서울시 가계부채 관련 현안과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한 다음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 마련
- 지원대상별로 정책수단을 수립하여 정책을 이행
 -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한계가구, 영세자영업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수립
 - 부동산 부문은 정부 정책의 보조 역할 담당, 한계가구 부문은 복지 분야의 정책수단 활용, 영세자영업자 부문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 검토 등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복합적·장기적 처방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	- 장기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결 - 체계적 정책체계를 수립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
미시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 접근	- 한계가구와 영세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 - 사회복지체계를 활용한 한계가구 지원
서울시 가계부채 후속대책 마련	- 서울시 가계부채 관련 현안과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 - 서울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종합적 대책 마련
지원대상별 정책수단 수립	- 부동산 부문에서는 정부 정책의 보조 역할 담당 - 한계가구는 복지 분야의 정책수단으로 가계부채 문제 풀기 - 영세자영업자는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 검토

I 복합적·장기적 처방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

장기적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문제점 해결

- 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복합적 처방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노력
 - 가계부채 문제는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책 처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 따라서 가계부채는 장기적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

체계적 정책체계 수립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

-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
 -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의 문제도, 한계가구의 문제도 될 수 있는 등 문제의 발생 원인이 단편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문제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서울시는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다음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정책수단을 동원
 - 가계부채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
 - 서울시는 가계부채 문제가 전국과 비교하여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부터 시작하여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에 본격적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

I 미시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 접근

한계가구·영세자영업자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

- 부동산 부문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중앙부처가 풀어야 할 숙제
 -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
 - 부동산 부문의 가계부채 문제는 전국이라는 범위에서 부동산 정책과 연결하여 긴밀하게 다루어져야 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 지자체는 미시적 측면에 해당하는 한계가구와 영세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
 - 한계가구와 영세자영업자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지역과 상권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사회복지체계 활용한 한계가구 지원

- 서울시는 사회복지체계를 활용한 지원으로 한계가구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
 -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시민의 생활상을 더 잘 파악하고 있으며, 접촉의 기회가 많은 것이 장점
 -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한계가구의 가계부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

I 서울시 가계부채 후속대책 마련

서울시 가계부채 관련 현안·정책 점검하고 평가

- 2012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수단이 필요한 시점
 - 서울시는 2012년 3월 28일에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세부 정책들을 시행
 - 지금은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 발표 당시와 경제적 상황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반영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

지속적 모니터링 토대로 종합적 대책 마련

-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는 서울시의 상황적 추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 새로운 정책수단 수립에 앞서 서울시의 가계부채 관련 현안과 정책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

I 지원대상별 정책수단 수립

부동산 부문: 정부 정책의 보조 역할 담당

- 부동산 부문에서 서울시는 정부 정책의 보조 역할을 자처하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 투기가 유발하는 시장왜곡에는 엄중히 대처하고, 무분별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
 -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행해 투기가 악성 가계부채로 연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한계가구 가계부채 문제: 복지 분야의 정책수단으로 풀기

- 한계가구의 가계부채 문제는 복지 측면에서 접근
 - 한계가구의 가계부채는 단순히 부채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의 문제인 사례가 다수이므로, 이들의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
-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한계가구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부채 상환 능력을 키워줄 필요
 - 취약가주들이 자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공해 이들의 자립을 도울 필요
 - 서울시의 정책수단인 뉴딜일자리 사업을 활용하거나 투자·출연기관 등과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

영세자영업자 가계부채 문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검토

- 자영업자에게는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
 -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은 경기침체가 원인인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서울시는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 서울시는 가용자원 한도 내에서 경기 활성화와 함께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
 - 자영업자를 위한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꾸준히 확보
 - 금리가 높은 자영업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시중은행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